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Online Series

2021. 04. 12. | CO 21-12

김 석 진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매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은 석탄 밀수출,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공격, 정제유 밀수입 등 여러 가지 제재 회피 행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재 회피 규모가 제재를 무력화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제재 회피를 통해 당장의 경제적 피해는 다소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 제재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제재는 완벽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 당국을 압박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지 2년이 지났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협상 재개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재는 제대로 집행되고 있을까?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런 행동은 제재 효과를 얼마나 약화시키고 있을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공개하고 있다.¹⁾ 이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은 석탄 밀수출,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공격, 정제유 밀수입 등 여러 가지 제재 회피 행동을 활발하

게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재 회피 규모가 제재를 무력화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제재 회피를 통해 당장의 경제적 피해는 다소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 제재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석탄 밀수출, 규모는 제한적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²⁾ 유엔 안보리는 2016~2017년에 북한의 상품수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그 결과 2017년 4분기 이후에는 기존의 주요 수출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금지되었다. 북한 어장에서 조업권 거래도 2018년부터 금지되었고 2020년부터는 해외 파견 노동자의 외화 벌이도 금지되었다. 이로써 관광과 일부 품목의 소규모 수출을 제외한 합법적 외화벌이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광 및 합법적 수출까지 거의 중단되었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외화벌이 사업을 계속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석탄 밀수출이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2016년 11월)에 의해 연간 약 4억 달러로 제한된 데 이어 2371호(2017년 8월)에 의해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각국 공식 무역통계에 의하면, 2017년 북한의 석탄 수출은 4억 달러 상한을 1,200만 달러 이상 초과했다. 또한 전문가 패널 조사에서 2017년 1~11월에 30여 차례의 보고되지 않은 석탄 밀수출이 탐지되었다.³⁾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된 후인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2월 사이에도 주로 환적 방식을 이용한 25회의 석탄 밀수출이 탐지되었다.⁴⁾

전문가 패널은 2019년에는 석탄 밀수출 규모가 더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1월에서

- 1) 대북제재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이다. 이 위원회는 유엔 안보리가 처음 대북제재를 시작한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전문가 패널은 2009년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해 구성되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는 대북제재위원회 웹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 (Accessed April 2, 2021). 아래에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할 때에는 URL 주소 없이 보고서 번호와 발간 날짜만 표기한다.
- 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장형수·김석진,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경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현대북한연구』, 제22권 1호 (2019), pp. 8~43 참조.
- 3) S/2018/171 (March 5, 2018), p. 21.
- 4) S/2019/171 (March 5, 2019), p. 21; Annex 15, pp. 120~121.

8월까지 수출물량이 약 370만 톤, 수출금액은 약 3억 7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⁵⁾ 정확히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9월 이후에도 밀수출이 계속되어 2019년 연간 수출액은 이보다 더 큰 수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또 전문가 패널은 2020년 1~9월에도 400회 이상의 수송을 통해 250만 톤 이상의 석탄이 밀수출된 것으로 추정했다.⁶⁾ 금액 추정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2020년 국제 석탄가격이 2019년에 비해 많이 떨어진 점⁷⁾을 고려하면, 2020년 수출액은 2억 달러를 밑돌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의 석탄 밀수출은 2020년 7월 말 이후 잠정 중단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외국 선박의 북한 항구 입항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⁸⁾ 최근 보도에 의하면, 2021년 3월 들어 중국을 오가는 북한 선박들의 해상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석탄 밀수출이 재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⁹⁾

북한의 석탄 밀수출 규모는 제재 이전 수출에 비해 훨씬 작다. 북한이 수출하는 석탄 대부분은 중국으로 가는데,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이 금지되기 전인 2015~2016년 대중국 수출 규모는 연간 2천만 톤 내외, 금액으로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이였다. 최근의 밀수출 규모는 연간 수백만 톤, 금액으로는 수억 달러 정도로 제재 이전에 비하면 몇 분의 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즉 제재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완전 봉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크게 줄이는 효과는 발휘한 것이다.

<표 1>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 추이, 2012~201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물량 (만 톤)	1,186	1,653	1,546	1,963	2,245	491
금액 (억 달러)	12.2	13.9	11.4	10.6	11.9	4.1

자료: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data>> (Accessed April 2, 2021).

5) S/2020/151 (March 2, 2020), pp. 25~26.

6) S/2021/211 (March 4, 2021), p. 28.

7) 세계은행 원자재 가격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국제 석탄가격을 대표하는 호주산 석탄의 연평균 가격은 2019년 톤당 77.89 달러에서 2020년 60.79 달러로 떨어졌다. 국제 석탄가격은 2020년 가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산 석탄 가격은 2020년 8월 50.14 달러로 바닥을 친 후 다시 빠르게 상승해 2021년 3월에는 94.92 달러가 되었다.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https://www.worldbank.org/en/research/commodity-markets>> (Accessed April 6, 2021).

8) *Ibid.*, pp. 4, 21.

9) “북 선박, 3월 들어 해상활동 증가,” 『자유아시아방송』, 2021.3.15.,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ship-03152021153733.html> (검색일: 2021.4.6.).

기타 외화벌이 규모도 크지 않아

또 하나 중요한 외화수입원은 어업권 거래이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중국 어선들에게 북한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해 왔는데,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북한의 어업권 거래를 금지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 보고에 의하면, 2018년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어업권을 팔아 외화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어업권 변호권을 달거나 임시 등록증을 받아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계속 목격되었고 어업권 구매 사실에 관한 증언들이 나왔다.¹⁰⁾ 한 회원국은 2018년에 북한이 어업권 판매로 번 외화수입이 1억 2천만 달러였을 것으로 추정했다.¹¹⁾ 그 이후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큰 변화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외화수입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어업권을 팔아 북한이 올린 외화수입이 2011~2013년에 연평균 약 1억 달러, 2014~2016년에는 약 1억 7천만 달러였던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¹²⁾ 이상의 추정치들이 타당하다면, 북한의 어업권 수입은 2018년 이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중요한 외화수입원이 될 수 있다. 2019년 8월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은 2015년 12월에서 2019년 5월 사이에 남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은행계좌 및 암호화폐 탈취 시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 총액이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¹³⁾ 그러나 이 금액 전체를 북한이 실제로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 패널이 조사한 사례들은 탈취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고된 경우(reported thefts)만이 아니라 탈취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된 경우(attempted thefts)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¹⁴⁾ 실제로 탈취가 발생했다고 보고된 사례만 합하면 추정금액은 2억 7,200만 달러로 크게 줄어든다.¹⁵⁾ 한편 전문가 패널은 2021년 3월 보고서에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북한이 훔친 가상 자산(virtual assets)의 총액이 3억 1,640만 달러라는 한 회원국의 추정결과를 인용했다.¹⁶⁾

10) S/2019/171 (March 5, 2019), p. 28; S/2020/151 (March 2, 2020), pp. 43~44; S/2021/211 (March 4, 2021), p. 27.

11) S/2020/151 (March 2, 2020), p. 43.

12) 장형수·김석진, “북한의 외화수입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p. 19.

13) S/2019/691 (August 30, 2019), p. 26.

14) S/2019/691 (August 30, 2019); Annex 21, pp. 109~112.

15) Hyungsoo Zang, “What the Estimates of the Balance of Foreign Exchange of North Koreans Would Tell Us,” *KDI Working Paper* (Korea Development Institute, July 2020), p. 18.

16) S/2021/211 (March 4, 2021), p. 56.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재로 인해 줄어든 외화수입을 보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 일단 금융자산을 탈취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외화로 세탁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법무부는 2020년 8월, 북한 해커들이 운용한 것으로 추정된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고, 그 후 누구도 이 계좌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 미국 정부가 계좌 소유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¹⁷⁾ 또 사이버 범죄와 돈 세탁은 복잡한 거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외국 협조자들에게 큰 수익을 나눠줘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들까지 고려하면, 북한이 사이버 금융범죄를 통해 실제로 획득할 수 있었던 외화수입은 훨씬 더 적었을 수도 있다.

이제까지 검토한 활동 외에도 북한은 여러 가지 외화벌이 사업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패널은 2019년에 북한이 적어도 1백만 톤 이상의 모래를 수출해 2,2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¹⁸⁾ 모래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광물도 밀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은 본래 석탄이었고 나머지 광물의 수출 비중은 크지 않았으며, 밀수출에서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하나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의류제품도 밀수출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전문가 패널의 조사에서는 탐지되지 않았다. 의류 수출은 임가공 방식이어서 북한이 얻는 외화수입은 본래 많지 않았으며, 밀수출로 벌 수 있는 수입은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군사협력, 건설사업, 예술품 판매 등 여러 가지 불법 거래를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하고 있지만, 이들 개별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 규모 역시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남는 사업은 노동자 해외 파견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모든 회원국은 해외 취업 중인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 말까지 모두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2020년부터는 노동자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를 금지한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패널 보고에 의하면, 송환이 다소 지연되던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 노동자 중 일부가 귀국하지 못하고 일부 국가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 숫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⁹⁾ 2015~2017년 시기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임금수입은 연평균 2억

17) “미 검찰, 북 가상화폐 계좌 몰수 절차 막바지,” 『자유아시아방송』, 2021.1.25.,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ybermoney-01252021143236.html> (검색일: 2021.4.6.).

18) S/2020/151 (March 2, 2020), p. 39.

19) S/2020/840 (August 28, 2020), pp. 37~42; S/2020/151 (March 2, 2020), pp. 50~51.

달러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²⁰⁾ 2020년 이후에는 이 수입의 대부분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제유는 충분한 양을 밀수입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상품수출은 대부분 금지했지만 상품수입은 일부 품목만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2017년 12월의 안보리 결의 2397호는 금속제품(HS 72~83), 기계류(HS 84), 전기전자제품(HS 85), 자동차 및 기타 수송장비(HS 86~89)의 대북한 수출(북한 입장에서는 수입)을 금지했다. 석유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원유 공급은 연간 400만 배럴(52만 5천 톤)까지만 허용하고 정제유 공급은 연간 50만 배럴까지만 허용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왔던 당시에는 석유 수입 제한 조치가 금속,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수입 금지 조치보다 훨씬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왜냐하면 금속,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수입 금지는 주로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 발전 잠재력을 훼손하지만 당장의 소비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석유 수입 제한은 수송연료 부족에 따른 수송난을 초래해 전반적 경제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7년 12월 당시 주유엔 미국 대표부는 북한의 2016년 정제유 수입 물량이 약 450만 배럴이었으므로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 물량을 89%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²¹⁾ 중국에서 공급되는 원유를 북한 내에서 정제해 그 중 일부를 수송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송연료 공급의 감소폭은 정제유 수입 감소폭보다는 작겠지만, 아무튼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북한은 심각한 수송난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최근까지 북한에서 심각한 수송난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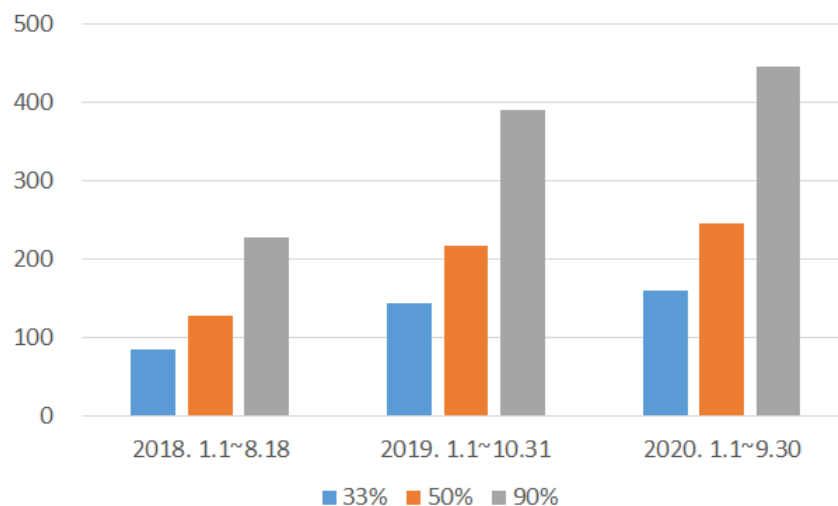
20) 이 추정치는 국가정보원의 국회보고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장형수·김석진,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 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p. 21.

21) United State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Fact Shee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on North Korea,” December 22, 2017, <<https://usun.usmission.gov/fact-sheet-un-security-council-resolution-2397-on-north-korea/>> (Accessed April 6, 2021). 공식통계에 나타난 수입량은 미국이 추정한 것과 많이 다르다. 유엔 상품무역통계(UN Comtrade)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북한이 2016년에 수입한 정제유 물량은 약 28만 톤(215만 배럴)이었다. 즉 미국은 북한이 수입한 정제유 중 무역통계에 보고되지 않은 물량이 보고된 물량보다 더 많았다고 추정한 것이다. 공식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김규철, 『북한의 석유교역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8), p. 35 <표 2-8> 및 p. 42 <표 2-11> 참조. 톤-배럴 환산은 휘발유 8.50, 경유 7.23, 중유 6.91의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한 것이다. 환산율에 대해서는 UN Energy Statistics Yearbook - Conversion factors, <<https://unstats.un.org/unsd/energy/yearbook/conversion.htm>> (Accessed April 6, 2021) 참조.

않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그 후에도 충분한 양의 정제유를 밀수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전문가 패널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주로 선박 간 환적 방식을 이용해 정제유 밀수입을 계속하고 있다. 밀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송선박(tanker) 저장 탱크의 적재 비중을 33%로 낮게 가정해도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연간 상한 50만 배럴을 훌쩍 넘고 90%로 가정하면 상한의 몇 배에 이른다. 저장 탱크에 충분한 양을 적재해야 수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실제 적재비중은 높은 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안보리 결의가 허용한 공식 수입 물량까지 합하면, 북한 내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정제유가 공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1> 북한 정제유 밀수입량 추정치

(단위: 만 배럴)



자료: S/2019/171 (March 5, 2019), p. 80; S/2020/151 (March 2, 2020), p. 89; S/2021/211 (March 4, 2021), p. 15.

주: 정제유 수송선박(tanker) 적재 비중을 33%, 50%, 90%로 가정한 경우의 추정치를 표시한 것임.

정제유 외의 품목이 대규모로 밀수입된 정황은 별로 관찰되지 않았다. 최근 전문가 패널의 보고에서는 2020년에 중국으로 석탄을 밀수출한 선박 중 일부가 인도적 화물(humanitarian cargo)이나 트럭을 비롯한 일부 금지 품목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온 정황이 탐지되었다.²²⁾ 하지만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1년 초 열린 8차 당 대회에서

‘2016~2020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로 기계류와 금속제품 등 자본재 수입이 중단되어 각종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은 것이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추측된다.²³⁾ 이로 미루어 보아 자본재 수입 금지 조치는 당초 기대한 효과를 대체로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재 회피로 경제위기 타개하기는 어려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재 회피를 통해 경제위기를 모면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재가 크게 강화되기 이전인 2012~2016년 시기 북한의 상품 수출액은 연간 30억 달러 내외였고, 이외에도 어업권 판매, 해외 노동자 파견, 개성공단 등을 통해 연간 몇 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벌 수 있었다. 제재가 강화된 후 북한의 공식 상품 수출액은 과거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석탄 밀수출, 어업권 거래, 사이버 금융공격 등 제재 회피 행동으로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연간 몇 억 달러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불법적 외화벌이 규모는 제재 피해를 보충하기에는 아주 많이 모자란 수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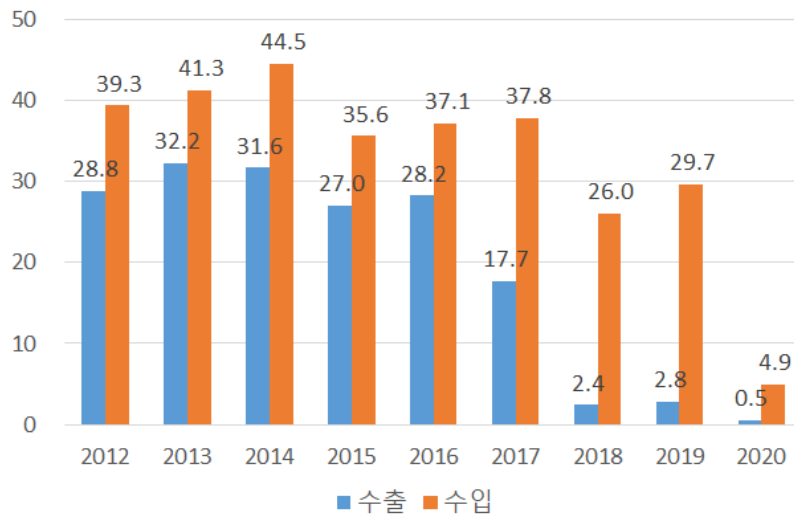
북한의 상품수입은 2012~2016년 시기에 연간 35~45억 달러 정도였는데, 제재가 강화된 후 2018~2019년에는 정상적 수준의 70%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2018년부터 금속, 기계, 전기전자, 수송기기 등 자본재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며, 그 외 일반 품목의 수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또 앞에서 보았듯이 유엔 안보리가 물량을 제한한 정제유는 밀수입을 통해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2019년까지는 자본재 수입 중단으로 투자 활동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그 외 품목의 공급은 정상적이어서 소비생활에 미치는 피해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외화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제재 이전에 벌어들인 외화보유액을 이용해 상당한 수준의 수입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북한 당국이 국영 경공업을 현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산 소비재 공급이 다소 늘어난 것도 소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

22) S/2021/211 (March 4, 2021), pp. 28~31; Annex 37, pp. 231~232.

23) 김석진,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06, 2021.2.24.), pp. 2~5.

〈그림 2〉 공식 통계에 보고된 북한 상품 수출입 총액 추이, 2012~2020

(단위: 억 달러)



자료: 2012~2019년은 KOTRA, 『2019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서울: KOTRA, 2020), p. 40; 2020년은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검색일: 2021.4.2.).

주: 2012~2019년은 전세계 수출입, 2020년은 대중국 수출입.

이런 사정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국경 봉쇄가 이루어지면서 크게 변했다.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들의 수입까지 대폭 줄어들어 대외무역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뚜렷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물론 국경 봉쇄가 해제되고 무역이 재개되면 북한의 수입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거의 수입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상품수입을 많이 할 경우 외화보유액이 계속 줄어들 것이며 불법적 거래로 벌 수 있는 외화수입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행동은 제재를 무력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제재는 완벽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 당국을 압박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무역은 제재 이전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에 머무를 것이며, 북한 경제는 이에 따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KINU 2021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